

야 “국민 원하는 것은 파면”... 여 “공정한 심판 기대”

정치권,尹 선고 앞두고 긴장 최고조

민주당 의원들 국회 경내서 비상행동 조국혁신당 “전원 일치로 파면 선고” 대통령실 “차분하게 결정 기다릴 것” 탄핵 심판 인용시 5월6초 조기 대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1일 일제히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환영 입장을 내면서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

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현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온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해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파면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다시 국군통수권, 행정

권, 외교권을 쥐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옹혜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현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현재에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현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현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탄핵 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현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차분하게 현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인 5월말이나 6월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우원식 국회의장 “법치주의 바로서는 날 되기를 기원”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데 대해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현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고기



일을 통지했다. 현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본론이 마무리된 지 2월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

뉴시스

정청래 “드디어 선고일 잡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청래(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자 “역사는 직진하지도 않지만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방금 전 현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공문 사진을 올렸다.

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2024년8 대통령(윤석열)’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



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되새긴다”며 “국민이 피로 써 온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 자랑스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믿고 역사적인 날,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나가겠다”며 “진인사 대천명,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8대0 인용 전망”

최기상 민주당 의원 밝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각·각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에는 (선고기일을) 정하기 어려웠었고 오늘 정도로 (선고기일을 정해서 공지)하는 것은 무난했고 그 다음



에 인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잡은 것 같다”며 “(현재가) 평결을 안 했으니 8대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의원은 여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각·각하’ 전망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형식상 평결은 늘 당일날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 그래야 정보가 안 새고 밖에서 모른다”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기각된다고 기대했던 것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도 주말을 거치면서 도저히 (인용 외에) 다른 답을 찾아가는 나라가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위기를 많이 느꼈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2~3일 두차례 본회의... ‘쌍탄핵’ 유보할 듯

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추진 유동적 박찬대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

국회의장실은 1일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며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대행을 향해 이틀 뒤인 이날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만큼, 이 같은 쌍탄핵 추진 여부와 일정 등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기일이 지정된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일 공지 후 삼

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의돼 2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될 최 부총리 탄핵안과 관련해선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충분히 본회의 기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며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언행 주의보’...민감한 시기에 절제해야

의원들에 “각별히 신중” 공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의원들에게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행 주의보”를 내렸다.

민주당은 1일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의원들은 현재 선고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는 당내에서 제기된 현재 선고 불복 주장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국회 경내 비상

대기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비상행동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날까지 열리는 저녁 광화문 집회에 시민들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었던 국회 상임위원회별 기자회견은 서울 광화문 전막당사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